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 ① 사람 중심 경제로 3%대 중속 성장 가능한가?
- ② 부동산 경기,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 ③ SOC 저투자, 미래 성장 동력 약화
- ④ 재정건정성 논쟁, 부정론 VS 긍정론
- ⑤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에 동참하는가?
- ⑥ 수출 경기와 수출 경쟁력의 비동조화
- ⑦ 고용시장 변화와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Wage-Push Inflation) 우려

목 차

■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2
3. 시사점	16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정 민 연 구 위 원 (2072-6220, chungm@hri.co.kr) 외 6명

Executive Summary

□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 개요

경제 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2018년 한국 경제는 3%대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나 회복세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상존해 2%대 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2018년도 한국 경제에서 쟁점으로 부상할 만한 7가지 이슈를 부문별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

구분	이슈 제목	선정 배경
성장률	① 사람 중심 경제로 3%대 중속 성장 가능한가?	- 경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경제성장률 회복 여부에 대한 논란 가중 예상
실물	② 부동산 경기,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 부동산 대책 발표 등으로 인해 향후 부동산 경기 방향성은 불확실성이 확대
	③ SOC 저투자, 미래 성장 동력 약화	- SOC 예산이 대폭 감축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전망
재정	④ 재정건전성 논쟁, 부정론 VS 긍정론	-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 발표된 가운데 향후 경제성장 지연으로 인한 세수 확보 한계로 재정건전성 훼손 가능성이 상존
금융	⑤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에 동참하는가?	-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전환될 전망이지만, 한국은 경제 여건 상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
대외	⑥ 수출 경기와 수출 경쟁력의 비동조화	- 최근 수출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수출 경쟁력 약화 요인들이 상존해, 이들 간의 비동조화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고용 / 물가	⑦ 고용 시장의 변화와 임금인상 인플레이션(Wage-push inflation) 우려	-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 정책 등으로 임금 인상이 예상되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① (사람 중심 경제로 3%대 중속 성장 가능한가?) 경제 회복의 원천을 가계 부문의 소득 증대에 두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주도성장론의 주요 논지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 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성장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반면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확대되는 효과보다 기업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르는 투자와 고용 감소의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있어 소득주도성장이 주장하는 경제 성장 제고 효과가 반감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② (부동산 경기,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2018년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국내 경기 위축, 가계부채 문제 현실화 등이 나타날 경우 부동산 경기의 하드랜딩 가능성도 상존한다. 전국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풍부하고 정부가 일관된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어 2018년 부동산 경기가 연착륙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내 경기 위축, 가계부채 부실 현실화, 기준금리의 가파른 상승 등이 나타날 경우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우려가 있다. 지역별로는 수급불균형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어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가격 움직임은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③ (SOC 저투자, 미래 성장 동력 약화) SOC 투자는 양적·질적으로 모두 충분하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SOC의 과소 투자가 지속될 경우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 SOC 투자는 경기 부양 및 고용 유발 효과가 높으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SOC투자 예산은 2015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GDP 대비 비율 역시 하락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통, 물류 등 국내 인프라의 국가 경쟁력 수준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노후화 현상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④ (재정건전성 논쟁, 부정론 VS 긍정론) 사람중심 지속성장경제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나 향후 경제 성장 부진으로 인한 세수 확보 한계로 재정 건전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정부는 2018년 예산안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삶의 질 개선, 일자리·복지 등에 대한 지출을 확대시키며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 원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러한 확장적 재정기조에도 경기 회복, 지출 구조조정 추진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경제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세수 확보가 어려워 재정건전성 훼손 가능성이 존재한다.

⑤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에 동참하는가?) 2018년 세계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은 경제 여건 상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은 기준금리 인하와 채권 매입 등 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자산매입을 통해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과 자산축소를 시작하였고,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 등도 자산매입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2015년 말 이후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고, 2017년 말부터는 연준의 자산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할 계획이다. 또한 유

립중앙은행은 최근 유로존의 경기 개선세를 반영하여 자산매입을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영란은행도 2017년 9월 자산매입 한도를 동결하여 향후 통화정책의 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한국은 국내 경기의 미약한 개선세 등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⑥ (수출경기와 수출 경쟁력의 비동조화) 수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수출 대상국의 경제 구조 변화, 통상 마찰 확산,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지연 등으로 2018년에는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세계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최근 수출경기는 추세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 구조 전환에 따른 수입 변화, 미국과의 통상 마찰 확대 등으로 주요국 수출 대상국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더욱이 국내 수출 제품 고부가가치화 지수는 최근 13개월 연속 100이하를 기록하는 등 수출구조 고도화가 지연되면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⑦ (고용 시장의 변화와 임금인상 인플레이션(Wage-push inflation) 우려) 2018년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정책 등의 영향으로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상승한 7,530원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23.6%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산업별로는 일부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분야, 규모별로는 소규모 사업체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존재하고 있어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정책으로 대상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 예상된다.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가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되는 경우 물가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시사점

2018년 한국경제에서 부각될 7가지 이슈들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중장기 성장 잠재력 제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SOC 투자의 양적·질적 확충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넷째**,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재정지출 조정 및 세입기반 확대가 요구된다. **다섯째**, 세계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에 대비하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대외 불확실성 차단을 통해 수출 경기 회복세를 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용의 가격 전가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및 물가안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 개요

○ 2%대 성장이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8년 국내 경제에서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7가지 요인을 선정 및 정리

- 성장률, 실물, 재정, 금융, 대외, 고용/물가 부문에서는 7개 이슈를 선정
 - 성장 부문에서는 「사람 중심 경제로 3%대 중속 성장 가능한가?」, 실물 부문에서는 「부동산 경기,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SOC 저투자, 미래 성장 동력 약화」가 선정됨
 - 재정 부문에서 「재정건전성 논쟁, 부정론 VS 긍정론」, 금융부문에서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에 동참하는가?」, 대외 부문에서 「수출경기와 수출 경쟁력의 비동조화」, 고용 및 물가 부문에서 「고용 시장의 변화와 임금인상 인플레이션(Wage-push inflation) 우려」 등이 선정됨

<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

구분	이슈 제목	선정 배경
성장률	① 사람 중심 경제로 3%대 중속 성장 가능한가?	- 경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경제성장률 회복 여부에 대한 논란 가중 예상
실물	② 부동산 경기,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 부동산 대책 발표 등으로 인해 향후 부동산 경기 방향성은 불확실성이 확대
	③ SOC 저투자, 미래 성장 동력 약화	- SOC 예산이 대폭 감축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전망
재정	④ 재정건전성 논쟁, 부정론 VS 긍정론	-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 발표된 가운데 향후 경제성장 지연으로 인한 세수 확보 한계로 재정건전성 훼손 가능성이 상존
금융	⑤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에 동참하는가?	-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전환될 전망이지만, 한국은 경제 여건 상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
대외	⑥ 수출 경기와 수출 경쟁력의 비동조화	- 최근 수출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수출 경쟁력 약화 요인들이 상존해, 이들 간의 비동조화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고용 / 물가	⑦ 고용 시장의 변화와 임금인상 인플레이션(Wage-push inflation) 우려	-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 정책 등으로 임금 인상이 예상되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2.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① 사람 중심 경제로 3%대 중속 성장 가능한가?

○ 경제 회복의 원천을 가계 부문의 소득 증대로 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가중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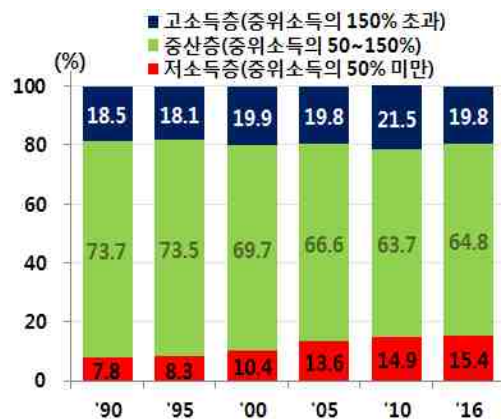
- 정체된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하고, 생산과 투자 증가 및 경제성장세 제고로 이어지는 사람 중심의 성장론,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 등장
 - 최근 2%대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소비 증가율은 그보다 낮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보임
 - 소비 부진의 직접적인 원인은 가계 소득이 더디게 증가하기 때문임. 가계의 경상소득¹⁾ 증가율은 최근 하락하면서 2016년 0.2%까지 떨어짐
- 소득주도성장론의 주요 논지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소득 계층간 양극화 심화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해져 이를 해결하는 것이 성장의 원천
 -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은 1990년 73.7%에서 2016년 64.8%로 축소된 반면, 저소득층(중위소득의 50% 미만)은 1990년 7.8%에서 2016년 15.4%로 확대
 - 따라서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경제 회복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및 가계소득 증감률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가계소득은 경상소득 기준.

< 소득 계층별 비중 >



자료 : 통계청.
주 : 도시 2인이상 가구 기준.

1) 경상소득은 비교적 장기간동안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가계가 예산을 세우고 지출 계획을 수립할 때 근거가 되는 소득임.

- 소득주도성장론을 반대하는 논지는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확대 효과보다 기업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르는 투자와 고용 감소의 효과가 더 클 가능성에 초점
 -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가계는 늘어난 소득을 소비에 지출하기보다는 저축을 늘릴 유인이 있으며 최근 저축률이 상승하는 점은 이를 뒷받침
 -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경영 여건 악화를 우려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R&D 투자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임금 상승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경우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 상 국내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제품을 소비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음
- 향후 경기 회복 지연시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효성 및 중장기 성장 전략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 가중 예상
 - 그 동안 경제를 견인했던 조선·해운·건설 등 주력 업종의 업황이 부진하고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이 농후함
 - 또한 저출산·고령화 진전으로 노동투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위축되면서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전망
 - 결국 일시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반등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견고한 성장세가 지속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

< 가계 저축률 >



자료 : 한국은행.
 주 : 가계 저축률
 =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총저축액 / 국민총처분가능소득.

< 잠재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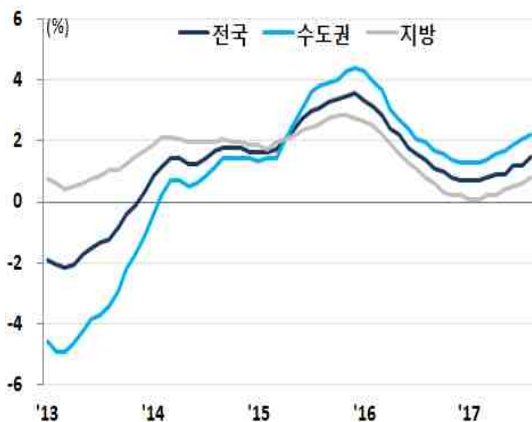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② 부동산 경기,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 2018년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국내 경기 위축, 가계부채 문제 현실화 등이 나타날 경우 부동산 경기의 하드랜딩 가능성도 상존

- 2017년 상반기에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로 1%대의 상승률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지속함
 - 반면 서울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 이상으로 전국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웃돌며 불안한 흐름임
- 정부는 6.19대책, 8.2대책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부동산가격 안정을 유도
 - 6.19대책은 이전보다 대출규제를 강화하였고 청약조정대상지역을 3곳 추가하여 총 40곳으로 늘리는 등의 조치였으나 부동산가격 불안정이 지속됨
 - 8.2 대책에서는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시를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하여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강력한 수요억제 대책을 시행함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인 8.2대책 이후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어들고 시장 관망세가 확산
 - 6월과 7월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난 부동산 거래량은 8.2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늘어나며 큰 폭으로 축소됨

< 주택 매매가격지수 추이 >



자료 : 한국감정원.
주 : 전년동기대비.

< 최근 주요 부동산 대책 >

	주요내용
6.19 대책	- LTV, DTI 등 대출규제 강화 - 청약조정대상지역 3곳 추가 -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 재건축조합원 공급수 '최대 3주택→2주택'
8.2 대책	- 투기과열지구 서울, 경기과천, 세종 등 27곳 지정 - 투기지역은 서울 11개구와 세종 등 12곳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가산세 증과 - 청약1순위 자격요건 강화

자료 : 국토교통부.

- 2018년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과 수급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
 - 시장에 풀린 풍부한 유동성, 부동산 이외에 대체 투자자산이 부족하다는 점 등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임
 - 다만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정책 기조,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공급 증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은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요인
 -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전국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풍부하여 부동산 가격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 될 것

- 다만 부동산 시장 리스크가 현실화 될 경우 부동산 경기의 하드랜딩 가능성도 상존
 - 국내 경기 위축, 가계부채 부실 현실화, 기준금리의 가파른 상승 등이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리스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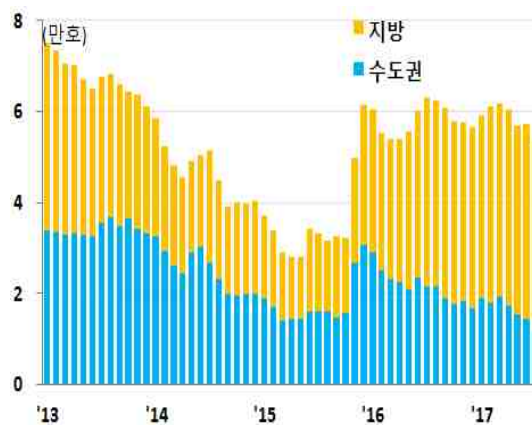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수급불균형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어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지방의 가격 움직임은 차별화될 가능성
 - 언제나 대기 수요가 꾸준한 서울 지역은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반면 분양 물량 증가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일부 지방의 경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수도권 지역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물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함

< 아파트 입주물량 추이 >



자료 : 부동산114.

< 수도권, 지방 미분양 추이 >



자료 : 국토교통부.

③ SOC 저투자, 미래 성장 동력 약화

○ SOC 투자는 양적·질적으로 모두 충분하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SOC의 과소 투자가 지속될 경우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가능성

- SOC 투자는 경기 부양 및 고용 유발 효과가 높으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

- 최근 건설투자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면서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5분기 연속 40% 이상을 유지하는 등 SOC 투자는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효과
-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2014년 10.2명/10억 원으로 평균 8.7명/10억 원 보다 높으며, 최근 건설투자 증가로 건설업의 취업자 증감 기여율이 2016년 3분기 12.0%에서 2017년 2분기 42.8%로 확대

- SOC 투자 예산이 감소하고 있고 GDP 대비 SOC 투자 예산 비율도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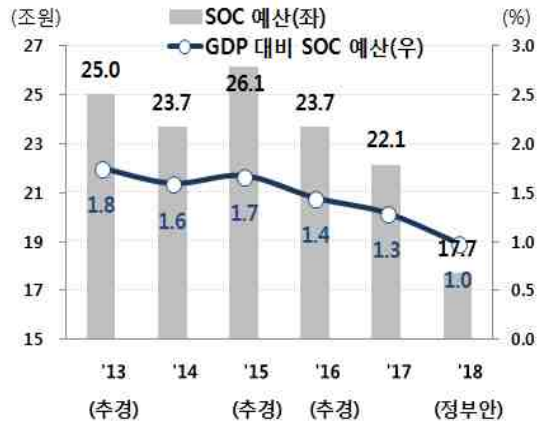
- 2018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SOC 투자 예산은 2017년 22.1조원에서 2018년 17.7조원으로 20.0% 감소
- SOC 예산은 2015년 26.1조 원까지 확대된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GDP 대비 SOC 예산 비율 역시 하락하는 추세

<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 및 건설업의 취업자증감 기여율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한국은행, 통계청 이용)

<SOC 예산 및 GDP 대비 SOC 예산 비율>



자료 : 기획재정부,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17, 2018년 GDP대비 SOC 예산 비중은 기획재정부 경상성장률 추정치를 적용하여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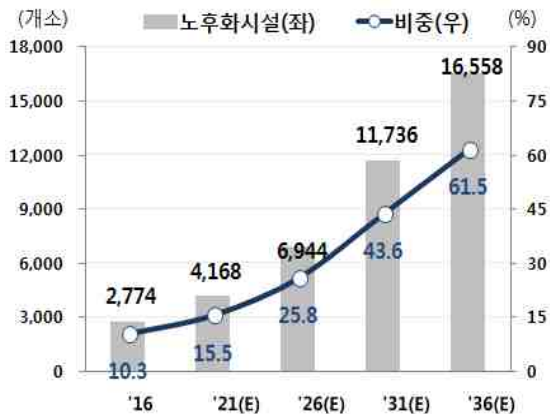
- 교통, 물류 등 국내 인프라 부문의 국가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
 -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 중 한국의 기초인프라²⁾ 경쟁력지수 순위는 2017년 27위로 하락세가 지속
 - 2010년대 초 19~20위를 기록하던 한국의 교통 경쟁력지수³⁾ 순위는 2015년 21위를 기록하며 정체된 모습
 - World Bank의 물류경쟁력 지수⁴⁾에서 한국 순위는 2007년 24위에서 2012년 21위까지 높아졌으나 2016년 24위로 다시 하락
- 국내 SOC 시설은 경제 고도성장기에 집중 건설되었기 때문에 현재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
 - 준공한지 30년 이상 지난 SOC는 2016년 기준 전체 중 10.3%에서 2021년 15.5%, 2026년 25.8%, 2031년 43.6%, 2036년 61.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 30년 이상 경과한 인프라의 증가로 성능 저하 및 잠재적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노후·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수요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

< 기초인프라 및 교통 경쟁력지수 >



자료 : IMD, 국토교통부.

< SOC 노후화 전망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주 : 전체시설 중 비중.

2) 기초 인프라 경쟁력 지수의 주요 평가항목은 교통경쟁력지수에 포함된 평가항목 이외에 수자원, 용수접근성, 상품접근성, 인구관련 항목, 에너지 인프라 효율성, 에너지 생산 및 소비, 전력비용 등임.
3) 교통 경쟁력지수의 주요 평가항목은 도로밀도, 철도밀도, 항공탑승객수, 항공이용만족도, 물류인프라효율성, 해운인프라 기업요구 만족도, 인프라의 유지와 개발적절성 등임.
4) 물류경쟁력 지수의 주요 평가항목은 각 나라의 통관, 물류인프라, 국제수송, 물류역량, 물류추적, 적시성 등임.

④ 재정건전성 논쟁, 부정론 VS 긍정론

○ 사람중심 지속성장경제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나 향후 경제 성장 부진으로 인한 세수 확보 한계로 재정 건전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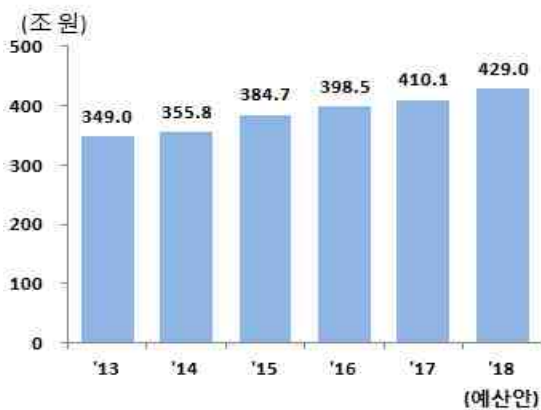
- 일자리 중심·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안보·안전 등을 중점으로 투자 방향을 설정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429조 원의 2018년 예산안을 편성

- 새정부 정부 정책 과정 이행과 일자리 및 복지 확대를 위해 확장적 재정을 편성
-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투자, 창업 지원 등을 확대하는 한편 제조업·서비스업을 혁신 생태계로 구축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충함

- 정부는 강력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 실시를 통해 재원을 확보

-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2017년 대비 12.9% 증가했으며 특히, 일자리 예산이 12.4% 증가하여 일자리의 양과 질 개선, 서민 복지 확대 등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함
- 한편, SOC 예산이 2018년에 2017년 본예산 대비 20.0% 축소

< 정부 예산 규모 >



자료 : 기획재정부.

주 : 2013~2017년은 추경을 포함한 국회 확정 예산, 2018년은 정부 예산안임.

< 분야별 자원배분 >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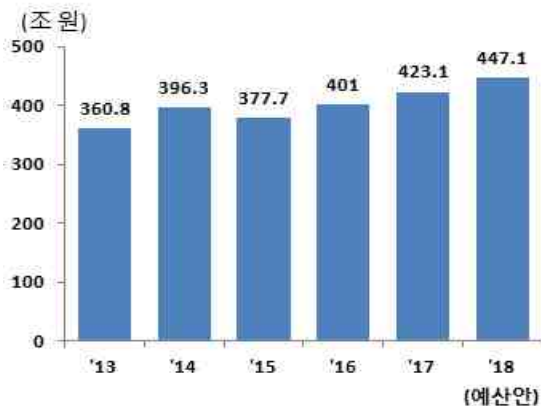
분야	예산	증감률	분야	예산	증감률
보건·복지·노동	146.2	12.9	교육	64.1	11.7
문화·체육·관광	6.3	△8.2	환경	6.8	△2.0
농림·수산·식품	19.6	0.1	R&D	19.6	0.9
공공질서·안전	18.9	4.2	SOC	17.7	△20.0
일반·지방행정	69.6	10.0	국방	43.1	6.9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9	△0.7	외교·통일	4.8	5.2

자료 : 기획재정부.

- 확장적 재정기조에도 재정건전성은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저성장 고착화 및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까지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는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전망
 - 정부는 2018년 경상성장률을 4.5%, 총지출 7.1%, 총수입 7.9%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고소득층·대기업 과세를 강화하는 등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중장기적으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내외로 유지될 전망

- 그러나 경제성장 부진 등으로 인한 세입기반의 약화, 복지 지출 증가로 인한 세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 상존
 - 2018년 한국 경제는 건설투자 부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對 중국 교역여건 악화 등으로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부동산시장 위축 등으로 부동산거래 관련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세수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함
 - 중장기적으로 SOC 예산 감축으로 인한 성장동력 위축, 복지지출 확대로 인한 세출 규모 증가로 이어질 경우 향후 재정건정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함

< 세입규모 전망 >



자료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중기 재정전망 >



자료 : 기획재정부.
주 : GDP 대비.

⑤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에 동참하는가?

○ 2018년 세계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긴축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은 경제 여건 상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은 기준금리 인하와 채권 매입 등 확장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

- 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는데, 미국은 2008년 1월 3.0%에서 2017년 현재 1.25%로, 유로존은 동기간 4.0%에서 0.0%로, 영국은 5.5%에서 0.25%로 기준금리를 인하함
- 또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서 직접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함

- 이에 따라 세계 주요국의 통화량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

- 미국의 본원통화는 2008년 1월 8,306억 달러 규모에서 2017년 8월 3조 9,100억 달러로 약 4.7배 급증함
- 또한 유로존의 본원통화도 2008년 1월 8,702억 유로에서 2017년 9월 2조 9,967억 유로로 증가했고, 영국도 동기간 628억 파운드에서 5,241억 파운드로 8.3배 팽창함

<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



자료 : FRB, ECB, BOE.

< 주요국 본원통화 추이 >



자료 : FRB, ECB, BOE.

주 : 영국의 본원통화는 유통현금과 지급준비금을 합하여 산출함.

- 2015년 이후 미국 연준이 금리인상과 자산축소를 시작하였고,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 등도 향후 자산매입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은 2015년 말 이후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고, 2017년 말부터는 연준의 자산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할 계획임
 - 또한 유럽중앙은행은 최근 유로존의 경기 개선세를 반영하여 향후 자산매입을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영란은행도 2017년 9월 자산매입 한도를 동결하여 향후 통화정책의 기조 변화 가능성을 시사함

- 한편 한국은 국내 경기의 미약한 개선세 등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긴축 기조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
 - 한국 경제성장률은 2017년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미약한 개선세를 보임
 - 또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국내 경기의 명확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음
 - 한편 주요국의 금리 인상으로 정책금리 수준이 역전되고,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인한 일부 자본의 유출 가능성 존재 등이 한국의 정책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한국의 주요거시변수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실업률은 계절조정계열 기준,

< 한국과 주요국의 정책금리 차이 >



자료 : FRB, ECB, BOE,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⑥ 수출 경기와 수출 경쟁력의 비동조화

○ 수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수출 대상국의 경제 구조 변화, 통상 마찰 확산,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지연 등으로 2018년에는 수출경쟁력 약화가 우려

-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추세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최근 수출 경기가 빠르게 개선

- 세계 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 증가율이 2017년 들어 9개월 연속 두자리를 기록
- 특히, 9월 수출액은 551억 달러로 사상 최대 월간 수출 실적을 기록
- 더욱이 2017년 무역 규모는 2014년 이후 3년 만에 1조 달러를 재달성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2018년에는 수출 대상국의 경제 구조 변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주요 수출 대상국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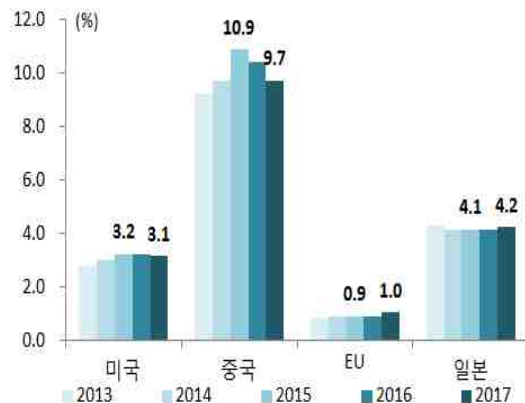
- 중국은 자체 조달을 늘리고 가공무역을 축소하는 등 경제구조를 전환하는 가운데 사드 문제 등으로 인해 2017년(1~8월) 한국의 시장 점유율 10%가 붕괴
- 최근 한미 FTA 재협상, 세이프 가드 등 통상 마찰로 인해 미국 수입 시장에서도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상존

< 수출입 증가율 추이 >



자료 :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 9월 수출입 동향, 2017.10.1.

< 주요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 >



자료 : 무역협회.
주 : 2017년 자료는 미국, 일본은 1~7월, 중국 1~8월, EU 1~5월까지의 수치임.

5)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도 수출입 증가율 전망치는 각각 13.8%, 15.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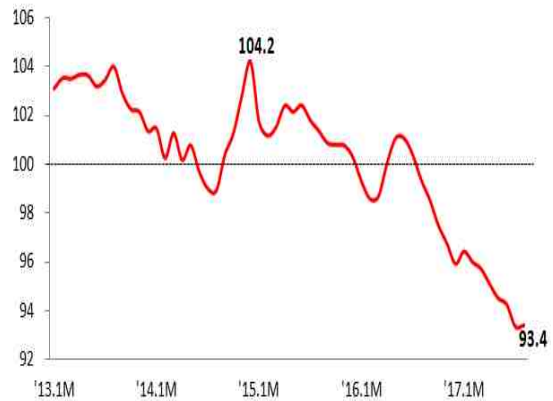
- 또한, 미국과 중국의 수입 시장에서 주요 8대 수출 품목⁶⁾ 시장 점유율이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수입 시장에서 주요 8대 수출 품목 중 석유화학, 기계, 자동차를 제외하고 5대 품목이 2013년에 비해 시장 점유율이 하락
 - 중국 수입 시장에서는 기계와 IT를 제외하고 8대 품목 중 6대 품목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
 - 특히,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와 정밀기기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2013년 7.0%, 21.8%에서 2017년(1~8월) 3.5%, 15.8%로 크게 축소
- 더욱이, 수출의 고부가가치화가 지연되면서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가 확산
 -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지수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비가격 경쟁력⁷⁾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수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지수는 2014년 12월 104.2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최근 13개월 연속 100 이하를 기록

< 미·중 시장에서 8대 품목 시장 점유율 > (단위 : %)

구분	미 국				중 국			
	'13	'15	'16	'17	'13	'15	'16	'17
석유화학	0.8	1.5	1.5	1.6	3.3	3.3	3.5	3.1
철강	5.5	8.4	8.0	4.9	18.5	18.6	19.9	17.3
철강제품	7.5	6.7	5.2	6.4	12.1	13.1	12.1	10.7
기계	3.5	3.7	3.3	3.6	9.1	11.1	10.3	10.1
IT	4.9	4.5	4.8	4.3	16.8	18.9	17.8	19.0
자동차	6.6	8.0	7.5	7.7	7.0	7.2	6.2	3.5
조선	14.3	0.1	0.1	0.2	25.6	5.7	4.8	23.0
정밀기기	1.4	1.4	1.4	1.3	21.8	21.1	18.7	15.8

자료 : 무역협회.
 주 : 2017년 자료는 미국 1~7월, 중국 1~8월까지 수치임.

< 한국 수출의 고부가가치화 지수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주 : 고부가가치화 지수는 수출단가지수를 수출물가지수로 나눈값으로 보통 100보다 높으면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

6) 주력 8대 수출 품목은 HS 코드 기준으로 27:석유화학, 72:철강, 73:철강의 제품, 84: 기계, 85: IT, 87: 자동차, 89: 조선, 90: 정밀기기로 분류되며, 이들 품목은 2016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의 75.3%, 수입의 63.6%를 차지하는 대표 수출 품목임.
 7) 기술, 품질 등이 수출 제품의 비가격 경쟁력을 나타내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수출 제품이 생산비용에 비해 얼마나 높게 팔리는지를 평가하는 고부가가치화 지수가 대리 측정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⑦ 고용 시장의 변화와 임금인상 인플레이션(Wage-push inflation) 우려

○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및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정책 등의 영향으로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우려

-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전년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농림어업 및 일부 서비스업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⁸⁾

-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060원 (16.4%) 인상하여 역대 최고 수준 인상액을 기록함
- 전체 근로자의 약 23.6%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일부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됨
- 사업체규모별로는 1~4인 사업체 근로자의 51.5%, 5~9인 사업체 근로자의 32.4%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됨

-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축소 정책 등의 영향으로 고용 증가 및 임금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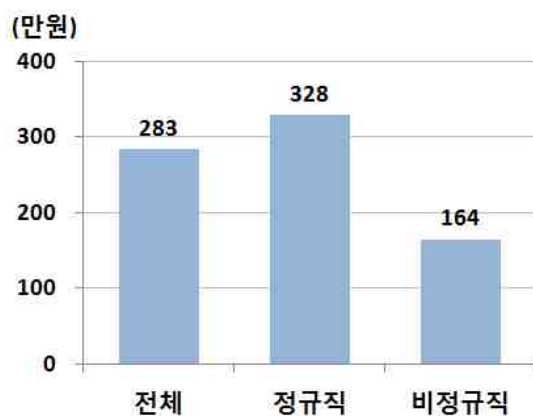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인해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기준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이 328만원, 비정규직이 164만원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주요산업 최저임금 영향률 >

산업분류	영향률(%)
농림어업	62.7
광업	0.0
제조업	12.5
전기, 가스, 수도사업	4.8
건설업	15.0
도매 및 소매업	32.6
숙박 및 음식점업	61.1
...	...
전체	23.6

자료 : 최저임금위원회.
 주 : 서비스업 부문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일부만 표시함.

< 고용형태별 임금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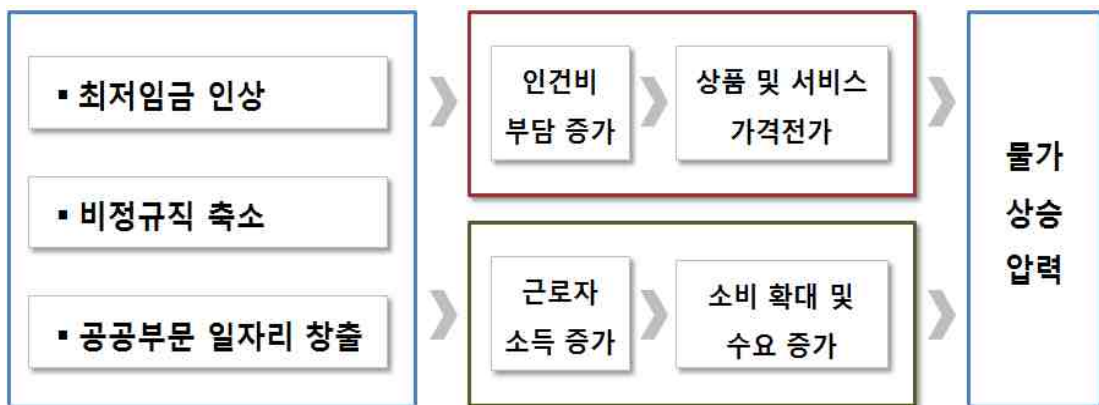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주 : 2016년 기준. 월임금총액 기준.

8) 최저임금 영향률은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됨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을 면하기 위해 임금인상이 필요한 근로자의 비율을 예측한 값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추정치를 인용.

- 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비용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킬 경우 물가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
 - 임금 인상은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비용 증가 해소방안으로는 고용 축소, 비용의 가격 전가, 생산성 향상 등이 있음
 -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 및 영세사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고용축소 등이 어려운 일부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의 임금 상승 및 상품 및 서비스에 가격전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물가 상승 압력이 증가⁹⁾할 전망이다
 - 농림수산물식품,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의 상품 및 서비스는 생활과 밀접한 품목으로, 전체 물가에 비해 생활물가 상승 압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 증대가 소비 확대로 이어질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
 -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키며,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미침
 -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따른 고용 증가로 인해 가계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가계 소득 증대는 소비 확대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고용 시장 변화의 물가 상승 압력 파급 경로 >



9) 강승복(2015),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에서 음식점 및 숙박업, 교육 및 보건서비스업,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 등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교적 영세한 사업체가 많은 일부 서비스업과 농림수산물식품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높은 것으로 분석함.

3. 시사점

첫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부작용을 감안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중장기 성장 잠재력 제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 불확실한 측면이 상존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매몰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성장 동력의 항구적 상실 위험을 고려하면서 세부적인 성장 정책 수립이 요구됨
- 특히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경제 내 성장과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소득주도성장론 시행에 따르는 경제 성장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임금 인상과 함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같이 추진되어야 함
 - 직업 교육 및 훈련 투자 확대를 통해 현직에서의 직업능력 배양은 물론 기술 변화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함

둘째,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기본적으로 수요·공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
 - 지역별, 평수별, 유형별 주택 수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급이 모자라는 부분을 중심으로 주택 정책을 추진
 - 반복되는 부동산가격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서울 강남권에 버금가는 인프라를 갖춘 지역을 개발해 특정 지역 수요를 분산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역점

- 부동산시장의 잉여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노력을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을 보는 일관된 시각 형성
 - 실제 부동산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 구축과 정확한 진단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는 시각의 일관성 마련
 - 정부 정책의 실현 가능성 확보 및 정책의 시장 선도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시장 내 신뢰성을 확보
 - 주택시장 변동 시 적절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수급여건 관련 지표 등 다양한 시장 데이터를 개발하는 노력

셋째, SOC 투자의 양적·질적 확충 및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 국내 경제는 양적·질적으로 SOC투자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확충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 단순히 투자의 양적 규모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노후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대체, 미래 경제·사회 변화 대비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시각에서 투자 전략을 수립

넷째,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재정지출 조정 및 세입기반 확대가 요구된다.

- 불필요한 지출 및 선심성 정책에 대한 지출을 조정하여 재정정책 여력을 확보해야 함
 - 재정 지출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 등 재정 규율을 강화하여 재정건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복지 지출 확대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연계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
 - 보육 및 교육 지원,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의 지출은 노동력 확충 및 노동 생산성을 강화하여 투자의 성격과 복지의 성격을 모두 가짐
- 고령화 및 복지 수요 증가 등 지출 확대 추세를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고소득층 및 대기업 위주의 증세는 소득 분배 개선에 효과적이거나 재정수입 증가의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 증가를 감내할 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

다섯째, 세계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에 대비하여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에 주력
 - 산업 구조조정, 청년 실업 등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을 개선하는 한편 투자 유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중장기적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함
 - 또한 대내외 경제 리스크 요인들이 글로벌 긴축 통화정책 기조와 결합하여 국내 경기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함
- 세계 주요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
 - 국내 금융시장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함
 - 또한 일부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가 다른 국가로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 체제 구축 및 협력을 강화

여섯째, 대외 불확실성 차단을 통해 수출 경기 회복세를 강화시켜고, 중장기적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통상 마찰 리스크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이 필요
 - 향후 통상 마찰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중국 정부와의 통상 채널을 강화하고 예상되는 분쟁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
- 최근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에 대한 공략을 통해 수출 다변화 전략이 필요
 -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등을 적극 활용하고 현지 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유망 품목을 위주로 집중 공략
- 수출 상품의 고부가치화, 부품 및 소재 산업 육성을 통해 수출 고도화 노력을 지속하고 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
 -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수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를 위한 기초 및 원천 연구에 집중하는 등 민간과 정부의 철저한 분담을 통해 R&D 효율성 제고

일곱째, 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용의 가격 전가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 및 물가안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인건비 상승 부담의 가격 전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
 -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 및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인건비 부담 충격을 완화해야 함
 - 교육훈련 지원 등을 바탕으로 한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 해야 함

- 유통시스템 관리감독을 바탕으로 한 가격 안정 및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수급안정 등 물가안정 방안 마련
 - 담합,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함
 -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경우 정부의 조기 구매 계약을 확대하고, 특정 품목 가격 급등 시 수입물량을 증가시켜 수급안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HRI

'2018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작성 담당

- | | |
|---|--|
| 【① 사람 중심 경제로 3%대 중속 성장 가능한가?】 | 홍준표 연구위원
(jphong@hri.co.kr, 02-2072-6214) |
| 【② 부동산 경기,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 | 김천구 연구위원
(ck1009@hri.co.kr, 02-2072-6211) |
| 【③ SOC 저투자, 미래 성장 동력 약화】 | 백다미 선임연구원
(dm100@hri.co.kr, 02-2072-6239) |
| 【④ 재정건전성 논쟁, 부정론 VS 긍정론】 | 김수형 연구위원
(soohyung@hri.co.kr, 02-2072-6217) |
| 【⑤ 글로벌 통화 긴축 기조에 동참하는가?】 | 오준범 선임연구원
(jboh19@hri.co.kr, 02-2072-6247) |
| 【⑥ 수출 경기와 수출 경쟁력의 비동조화】 | 정민 연구위원
(chungm@hri.co.kr, 02-207-6220) |
| 【⑦ 고용 시장의 변화와 임금인상 인플레이션 (Wage-push inflation) 우려】 | 신유란 연구위원
(yooran0111@hri.co.kr, 02-2072-6240) |